



'생태계보' 비무장지대 숲길 내년부터 만든다.

- 산림청, 'DMZ트레일' 구상안 용역완료...5개군에 600km 조성 시작 -

산림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DMZ)에 트레킹 숲길(트레일)을 만드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착수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 10월 용역 완료한 DMZ 트레킹 숲길 기본노선 구상안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DMZ 트레일 조성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양구 편치불둘레길(60km 중 25km) 조성사업을 시작한 산림청은 내년에도 24km를 추가로 만들면서 이 길과 동서로 이어지는 DMZ 트레일 노선을 우선 선정해 조성할 계획이다.

DMZ 트레일 기본노선 구상안은 서쪽의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서 동쪽 고성군 현내면까지 5개 군에 걸쳐 총 600km(주노선 460km, 보조노선 140km)의 트레일을 조성하고 12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이용객과 트레킹 매니아, 단체 체험단의 안내를 돕는 방문자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DMZ 트레일은 수도권에서 2~3시간대 거리로 접근성이 우수한 데다 주변에 노동당사, 학 저수지(이상 철원) 비수구미 계곡, 평화의 댐, 위라리 선사지(이상 화천) 제4땅굴, 을지전망대, 편치불둘레길(이상 양구) 대암산 용늪, 평화생명동산(이상 인제) 통일전망대, 화진포(이상 고성)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세계적 명품 트레일로 조성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각 지자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산림청은 DMZ 트레일 구상안 중 근 작전지역 내 노선은 국방부와 협의의 거치고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지자체들로부터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트레일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지리산둘레길 조성 뒤 인근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5만명이 방문했을 때 생산 26억 5300만원, 소득 4억8000만원, 고용 53명의 효과를 각각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DMZ 트레일 역시 수요가 늘어나면 농산물 판매, 민박 등 부수적인 농가수입도 발생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청, 작년 녹색분야 서민일자리 5만400개 창출 성과 올렸다

- 녹색일자리사업 목표 104%달성, 참여자 대부분 "만족...더 확대돼야"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 농산촌 및 여성 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숲가꾸기, 산불 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등의 산림 분야 녹색 일자리 연 1070만개를 제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상시 인원으로 따지면 5만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산림청이 당초 세운 목표인 상시인원 4만8543명, 연인원 1027만명의 104%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산림청은 올초 범 정부적인 경제위기 극복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1~2개월 빠른 1월 4일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녹색일자리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구, 산림서비스증진, 생태숲 및 생활림 조성·관리 등에 2012년까지 3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개를 만드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지난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2002년까지 5년간 연평균 1만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녹색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반응도 좋았다. 이 사업에는 저소득층과 여성 실업자 등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참여근로자의 94% 이상이 자신의 일에 만족했고 97% 이상이 녹색일자리사업이 확대·유지되기를 희망, 타 사업에 비해 일자리창출 효과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분야 녹색일자리사업은 숲해설가, 수목원코디네이터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자리와 40~60대 중·장년층이 참여하는 공공산림가꾸기 등의 사업이 골고루 포함돼 있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 또 이 과정에서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등 산림자원 관리도 할 수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화석연료 대체 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중략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장은 "앞으로는 녹색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해 임업분야 노동인력으로 양성하고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숲해설가 등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전문화되고 안정적인 민간분야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선충병 첫 발생지 동래구, 23년만에 청정지역 됐다.

- 감염률 더 안나와...청정지역 24곳으로 늘어 "2013년엔 전국을 청정지역으로" -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으로 발생했던 부산시 동래구 지역이 재선충병 발견 23년만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5일 부산 동래구를 비롯해 동구·수영구, 강원 춘천시, 충북 옥천군·단양군, 대구시 달성군, 경북 상주시 등 9개 지역을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엔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7개 읍·면, 동·리 3만2257ha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재선충병 청정지역은 24개 시·군·구로 늘어나게 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 동래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급속도로 번져나가 2005년에는 전국 67개 시군으로 확산되는 등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산림 당국의 꾸준한 방역활동에 힘입어 재선충병 시발지역마저 청정지역으로 변모한 것이다. 재선충병 청정지역은 재선충병이 완전 방제된 뒤 2년 동안 감염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돼 정상적인 소나무 및 조경수 이동과 산림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앞으로 3년간 예찰 활동을 펼치고 솎아 베기를 하는 등 소나무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13년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의 해로 설정하고 있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역이었던 동래구가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됐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총력방제 노력 등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명수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 공! 청정지역이 24개 시·군·구로 확대된 것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입업적 방제, 나무주사·항공방제를 적기에 실시하는 등 선제적 예찰·방제활동을 실시한 덕분”이라며 “주기적인 항공·지상 정밀 예찰을 강화하고 이·동 단위 특별관리체계를 더 강화해 2013년까지 대한민국을 소나무재선충병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정 현황(24개 시·군·구)

- 2008. 1. 1(5개): 강원 강릉·동해, 전남 영암, 경남 의령·함양
- 2009. 1. 7(4개): 울산 동구, 전북 익산, 경북 영천·경산
- 2010. 1. 7(6개): (광릉 숲), 서울 노원, 부산 연제, 대구 달서, 경기 포천, 강원 원주, 전남 목포시
- 2011. 1. 4(9개): 부산 동구·동래구·수영구, 대구 달성군, 강원도 춘천시, 충북 옥천·단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상주시

점봉·계방산, 국립공원 됐지만 현행대로 엄격한 보호조치

- 국립공원 편입돼도 산림청이 관리...환경부와 상호협력 계기 마련돼 -

산림청과 환경부는 그동안 관할 업무 조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설악산 인근 점봉산과 오대산 인근 계방산을 각각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되 산림청이 현행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전담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산위)를 열고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가 제출한 설악산·오대산 국립공원 구역확대 계획안대로 이 두 지역을 국립공원구역에 편입하기로 결했다.

중산위는 지난해 8월 6일 “산림유전자원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 지역의 국립공원 편입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해 12월 2일 국무총리실은 양 부처와의 업무조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산림청이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도록 자연공원법시행령과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산림청과 환경부는 앞으로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는 계기도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두 부처는 보호구역 중복지정 문제를 놓고 충

돌을 벌여왔지만 환경부는 점봉산과 계방산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성과를 얻었고 산림청은 점봉산과 계방산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내 모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기존 및 신규 지역 포함)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현행과 같이 관리하도록 제도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산림청은 점봉산과 계방산 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더라도 주목군락지 등 희귀한 산림유전자원을 엄격히 보존하기 위해 지금처럼 1일 탐방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도 반드시 안내원 인솔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들 지역에 설치된 생태관리센터에 전담인력을 상주시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탐방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생태관리센터를 통해 사전 입산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앞으로 점봉산과 계방산 지역이 산림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탐방객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공기관리청과 지방산림청을 통해 세부적인 현지조사를 거쳐 협력하기로 했다.

민통선지역 불법 입목벌채·산림훼손 현저히 감소

- 산림청·경기도 합동단속강화, 전년대비 75%줄어...6월 이후엔 한건도 없어. -

지난해 민간인 통제선 부근에서 일어난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특히 6월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모두 7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단속했다. 훼손면적은 4ha였다. 이는 2009년 10건 단속에 16ha가 훼손된 데 비하면 75%가 줄어든 수치다.

민통선 지역은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허점을 악용해 휴경기 개간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2009년 12월 만든 ‘민통선지역 산림훼손 방지대책’에 따라 지난해 휴경기 입목벌채 후 개간행위, 농경지주변 경계 침범행위 등 불법산지전용과 불법입목벌채에 대해 매일 현장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불법산지전용 4건(3만2795㎡), 불법벌채 1건(7982㎡), 경계침범 2건(360㎡)을 각각 적발해 7명(입건 6, 훈방1)을 사법처리했다.

지난해 경기도와의 합동기동단속 3회를 비롯해 매일 기동단속 활동을 펼친 산림청은 특히 신규 인삼재배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와 함께 272곳에 현수막을, 300곳에 불법경작 금지 깃발을 각각 설치했고 신문광고도 8차례 게재했다.

산림청은 올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및 군 부대 등과 협조해 효율적인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민통선지역 산림훼손방지 대책에 따라 월별·분기별 합동기동단속때 중점단속 대상과 단속방법을 다양화해 민통선지역 내 불법산림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도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 지역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나라꽃 무궁화 축제' 개최지 공모

-2월11일까지 신청받아 2월말 선정...3~5곳에 5000만원까지 국비지원-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 8월 열릴 '2011년 나라꽃 무궁화 축제' 개최지를 내달 11일까지 공모한다.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가 예산으로 축제 개최 비용이 지원된다.

산림청은 신청 마감 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2월 28일 최종 대상지 3~5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개 도시별 2000만~5000만원이다.

개최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축제 세부 계획 및 개최 필요성 설명 등이 포함된 축제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무궁화 개화시기를 고려해 광복절 전후인 8월 중에 실시되는 나라꽃 무궁화 축제는 지난 1991년 무궁화 큰잔치라는 이름으로 제1회 행사를 시작한 이후 2006년 제16회 때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축제의 지방 확산과 정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개최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공모에서는 독립기념관 및 부산시, 인천시, 홍천군, 진도군이 선정돼 이들 도시가 번갈아 가며 축제를 열었다.

2010년 임산물 수출 1억5천만불, 3년만에 증가세

- 일본시장 침체 불구 밤·송이 등 수출늘어... 전년보다 25% 상승 -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산물 수출액이 1억54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5% 늘어난 수치로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임산물 수출은 지난 2007년 1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억3800만 달러, 2009년 1억2400만 달러로 매년 감소해 왔다.

이같은 성과는 송이버섯, 생밤, 견포고, 파티클보드, 제재목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송이버섯은 주 수출국인 일본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수출이 140만 달러 늘었다.

지난해 국산 밤이 우리 임산물로는 최초로 미국 대만 프랑스의 대형 유통매장 입점에 성공해 연중 판매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도 임산물 수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내 10개 밤 수출업체가 최초의 연합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품목별로는 생밤이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미국과 유럽 시장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9.6%가 늘어난 2074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송이 수출도 31.4% 늘어난 585만 달러를 수출했고 표고버섯은 일본 시장의 소비가 감소했으나 대만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2009년보다 0.8% 증가한 523만 달러였다. 목재류는 리비아 알제리 등의 건설 붐으로 인한 합판 및 건축목공 등의 수요 증가로 5240만 달러를 수출했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식세계화 추진사업으로 한국산 임산물의 국제 인지도가 높아져 금년에도 임산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수출유망품목 지원, 해외시장정보조사 등을 실시해 중국과 일본에 집중돼 있는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박종호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장은 "올해에는 해외시장개척사업에 43억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수출용 장비지원에 4억원, 목재류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에 20억원 등 모두 67억원을 임산물 수출 확대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외시장 정보조사와 마케팅트스트를 실시해 신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는 한편, 수출 성과에 따라 대표 품목과 우수 수출업체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 산림현장서 녹색 꿈을 펼칠 인재들이 났다.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 발대식...2월부터 15명 해외보내 실무 투입 -

해외 산림현장에서 맘 홀리며 한국을 알리고 자신의 녹색 꿈도 펼칠 청년 인재 15명의 출정을 알리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 발대식'이 24일 오후 산림청에서 열렸다.

2월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해외산림현장으로 인턴활동을 떠나는 청년들은 산림청(청장 정광수)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 인턴사업을 통해 선발된 산림 관련학과 대학졸업생들이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무림페이퍼, 산림조합중앙회, 태림환경 등 해외 조림 사업을 벌이는 국내기업의 조림현장이나 국제산림협력사업 현장에 인턴사원으로 파견돼 산림조사, 산림사업 관리, 임산물 가공현장 지원업무 등의 실무를 익힐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인턴 기간 중에 국고 50%, 기업 부담 50%로 월 90여만원의 급여가 주어지고 주택거주비, 여학연수비 등도 지급된다. 인턴 활동 종료 후에는 해외 인턴 경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련 기업에 채용되는 기회도 넓힐 수 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제도는 지난 2009년 산림청 녹색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돼 올해로 제3기째를 맞는 맞춤형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산림전문가를 꿈꾸는 미취업 산림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산림자원개발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진취적 해외산림 전문가를 키우는 게 목적이 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6개국 15개 사업장에 41명이 파견됐고 이후 인도네시아 코린도, SK네트웍스, LG상사, 태림환경 등에 12명이 정식 채용됐다.

박종호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 인턴사업은 산림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적성을 살리고 역량을 높일 좋은 기회이자 기업의 해외산림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해외조림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개 나라에서 21개 기업이 228만7000ha의 조림 실적을 올렸다.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어 이 분야 전문 인력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제개편으로 산림보호·이용 더 효과적 추진 가능”

- 2월부터 백두대간수목원사업단·숲길정책팀 신설...
“적재적소에 인재배치” -

산림청이 직제개편을 통해 산림 보호와 산림 이용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정책목표를 한꺼번에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31일자로 직제개편을 단행,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과 숲길정책팀을 신설하고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업단은 산림청이 2013년까지 2515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신규로 조성 중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9년 1월부터 산림보호국 산하의 한시적 태스크포스팀으로 운영돼 왔지만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식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의 판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됐다. 산림청은 수목원 개원시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이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이용국 소속으로 설치되는 숲길정책팀은 기존의 산림휴양등산과 기능 중 등산지원 관련 업무를 이관받고 트레킹숲길 조성 및 운영 관리 기능을 합쳐서 만들어진다. 등산·트레킹 서비스 관련 업무를 포함해 트레킹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업무, 관련정책개발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까지 숲길 1000km 조성·등산로 4648km 정비 등 국정과제 목표 달성과 산림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등산 관련 업무를 떠 준 산림휴양등산과는 2월 1일부터 산림휴양문화과로 명칭을 바꾼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산림보호와 산림이용이라는 산림청의 중요한 정책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 새로운 조직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수액채취 및 해빙기 튼탄 산림훼손 집중단속

- 4월 하순까지 특별단속기간·불법전용·도벌 등도 단속대상 “전원 엄중조치” -

나무 수액 채취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수액채취 행위가 늘어나고 해빙기를 튼탄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달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를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지방산림청 및 시·도와 합동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역별 수액채취 시기별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병행한다.

또 불법 산림피해 우려지와 인·허가지역 경계침범, 소나무 조경수 도벌 및 도로공사 수목굴취, 농경용 관련 불법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에는 예외없이 전원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벌여 불법 산림피해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